

경찰행정학개론

Orientation : 강의시간에 무엇을 다룰 것인가?

국가의 역할과 경찰

- 국가와 사회 자체의 존립가치를 유지하는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이 있다. 안전과 질서도 그 중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과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법과 규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 국민의 안전유지와 사회질서를 확립하는 존재가 바로 경찰의 핵심활동이다.
- 과거 경찰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들에게 명령과 통제를 통한 강제력을 행사하는 국가기관 중 하나였다. 하지만 21세기 현재 경찰의 모습은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긍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지닌 조직으로 바뀌가고 있다.
- 특히 지역 경찰의 역할이 중요한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지역사회와 더불어 치안행정을 펼치지 않으면 조직의 뿌리가 통째로 흔들릴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럴 경우, 경찰은 그 존재의 의미가 희석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기에 경찰은 이제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협력 치안행정을 도모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 울산경찰은 명령과 강제력 행사의 주체가 아니라 울산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치안서비스 제공자로서 거듭 변신을 시도할 것이다.
- 작고 사소한 사건이라도 피해자 특히, 약자의 입장에서 진솔하게 귀를 기울이며 아픔을 함께하고, 예측·예방치안 활동을 바탕으로 각종 범죄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때,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체감치안 확보와 경찰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 확신한다. (울산신문, 2023)

국가의 임무와 경찰의 역할

- 이태원 참사에 대해 경찰이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또는 못한) 이유는 뭘까. 사고 직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경찰과 소방 대응이 사고 원인이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그날 밤 서울 이태원에서 156명의 꽃다운 이들이 숨졌다. 또 151명이 다쳤다. 거리 두기가 완화된 상황에서 여러 위험 징후가 있었다. 하지만 경찰, 구청, 시청 등의 행정기관은 사실상 손을 놓았다. 주최자 없는 행사라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 1일 공개된 112 녹취록에 말문이 막혔다. 사고 4시간 전부터 현장에서 '압사'를 경고하는 다급한 신고가 잇따랐다. 그 순간 국가는 없었다. 뒤늦게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응이 미흡했다"고 사과했다
- 자유는 곧 자율이다. 자기 이유와 책임 아래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고 이후 경찰관직무집행법 등 경찰의 개입 근거를 찾느라 바쁘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다. 올 9월 태풍 때 윤 대통령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엄중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것도 그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소홀했다.
- 정치의 목표는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다. 보수와 진보는 거칠게 보면 국가적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좀 더 집중할 것이냐의 차이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은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이번 참사를 통해 '작은 정부'를 돌아본다. 상황에 맞게 정부가 더 해야 할 일과 덜 해야 할 일을 잘 판단해야 하는데, 대전제가 '안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산일보, 2022/1106)

경찰의 역할과 국민의 저항(국민저항권)

- 정부는 "서울서부지법에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도저히 상상조차 어려운 불법 폭력 사태가 발생하는데 대해 정부는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훼손한 이번 사태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 경찰은 폭동에 가담한 피의자와 이를 교사하고 방조한 이들까지 모두 추적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서부지검도 관련자 처벌을 위한 전담팀을 편성했고, 대검찰청은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주요 가담자를 전원 구속수사하라"고 지시했다.
-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한겨레에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형법상 소요죄 등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검토하고 있다"며 "교사한 사람이 있는지도 추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서부지법을 찾은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도 '극우 유튜브 선동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배후 등에 대해 충분히 수사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 12.3 내란사태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해온 극우 인사들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전광훈 목사는 지난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당장 서울서부지법으로 모여 대통령 구속영장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집회를 마친 지지자들은 곧바로 서부지법으로 이동해 법원을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켰다. 윤 대통령 쪽 석동현 변호사도 지난 17일 서울구치소 앞 집회 무대에 올라 "도무지 감내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저항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지지자들을 부추긴 바 있다. (한겨레, 2025/01)

경찰의 임무와 서비스 (시민의 안전)

- 저혈당으로 길에서 쓰러져 있던 시민이 경찰의 빠른 판단 덕분에 위기를 넘긴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12일 오후 태백시 황지동 버스터미널 인근 길가에서 40대 A씨가 쓰러졌다.
- “남성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한 황지지구대 최하영(25) 순경을 비롯한 이두희 경위, 안치균 경사, 김남형 순경은 곧장 현장으로 출동해 A씨 상태를 살폈다. 의식이 희미하게 남아 있던 A씨는 경찰에 본인이 저혈당이 있다는 사실을 힘겹게 알렸다. 이에 최 순경 등 경찰들은 인근 마트로 달려가 콜라를 구매하고, 근처 모텔에서 숟가락과 빨대를 구해왔다. 이들은 숟가락에 콜라를 담아 A씨에게 조금씩 먹이며 상태를 확인했다.
- 이후 의식을 회복한 A씨를 부축해 119 구급대원에게 무사히 인계했다. 최 순경은 “처음에는 술을 마시고 길에서 잠들어 있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 다가가니 팔에 상처가 나 있는 등 심상치 않았다”며 “빠르게 조치해 응급환자가 무사히 회복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강원일보, 2023)

경찰의 임무와 위험 방지

- 112 장난 신고를 하면 단순 일회성이라도 최대 5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수 있다. 이때 경찰의 건물 진입을 막거나, 대피 명령을 거부·방해한 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기본법은 경찰의 긴급조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을 완화했다.
- 경찰 판단 하에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이 가능해진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에는 경찰이 출동 현장에서 '피난 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2024/07)

경찰관과 시민의 관계

- 지구대·파출소에서 근무하는 현장 경찰들이 “위화감,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시민 항의를 받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제복 경찰들이 집회 현장 인근 화장실 사용을 금지당해 주변 건물을 돌아다니는 일도 많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제복 경찰에 대한 존중이 예전보다 부족해진 걸 느낀다”며 “근무할 때는 정복 근무가 원칙인데 정복을 입었을 때 존중받지 못하니 사기가 뚝 떨어질 때가 많다”고 했다.
- 제복을 입은 경찰들이 고급 아파트나 주택 단지에서 출입 제한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지구대에서 일하는 B 경감은 “관할에 있는 비싼 아파트 단지들은 기본적으로 경찰 출입을 막고 있다”며 “사설 경호 업체가 와서 아파트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다.
- 경감은 “경호 업체 사람들도 제복 입은 우리를 존중하지 않는 느낌”이라고 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일하는 C 경위도 “고급 주택이나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려면 경호 업체 측에서 왜 출동했는지, 어디로 가는지 등에 대해 캐물으며 검문할 때가 많다”고 했다. 주민들은 “경찰복을 입은 경찰이 돌아다니면 아파트 이미지에 좋지 않다”고 하고 있다.

경찰활동의 혁신

- 광주자치경찰위원회(이하 광주자치경찰위)가 시민 참여 내실화로 민관 협력 체계를 다져가고 있다. 시민이 소극적인 치안 수요자에서 적극적인 치안활동 동반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청년, 장년,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치안 활동 참여를 위해 힘쓰고 있다.
- 광주자치경찰위는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춰 지방행정과 치안행정 연계를 위해 시청과 시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부서가 참여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자치경찰 3대 사무인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보호, 교통안전 분야에 관한 실질적인 협력사업 발굴과 원활한 사업 협의를 위해 구성됐다.
- 시청 12개 부서와 시교육청 2개 부서, 시경찰청 4개 부서의 과장급 18명이 속해 있다. 이들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총 14번의 실무협의회를 개최해 36개 안건을 협의했다. 우선 지자체와 지역경찰관서간 협업을 통한 치안 협력사업을 발굴했고 시민 참여 빔고를 자전거 순찰대 운영, 자율방범대 활성화 지원 등 다양한 치안 예방활동도 전개했다.
- 위원회 전문성 강화와 시민 참여를 통한 지역 맞춤형 치안 시책 발굴을 위해 현장 활동가와 실무 전문가로 구성한 정책자문단도 운영하고 있다. 정책수립 단계부터 시민이 참여해 시민체감도가 높은 맞춤형 치안시책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등일보, 2023, 11)

❖시민경찰학교과 공동체 치안 활성화

- 수원중부경찰서는 19일 오후 4시 청사 2층 회의실에서 '제3기 시민경찰학교 수료식'을 개최했다. '시민경찰학교'는 지역주민 치안 참여 확대와 공동체 치안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수원중부서 제3기 시민경찰학교에는 총 20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10일 입교식과 함께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9일간 ▲생활법률 강의 ▲경찰 사격 시뮬레이션 체험 ▲112 치안종합상황실 견학 ▲합동순찰 및 CSI 체험 등 총 20시간의 교육과정을 밟았다.
- 민윤기 수원중부경찰서장은 "시민경찰 수료식은 끝이 아닌 시작으로, 앞으로도 지역주민과 경찰의 연결고리가 돼주시길 바란다"며 "제3기 시민경찰 동료들과 함께 '안전한 우리동네, 안전한 수원'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일보, 2023/10/19)
- 목포경찰서-시민경찰연합회-자율방범대-생활안전협의회,야간 합동순찰 실시

❖공동체 치안 활성화 통해 특별치안활동 강화

- 목포경찰서(총경 이준영)는 지난 26일 목포시민경찰연합회·중앙자율방범대·중앙파출소생활안전협의회와 함께 목포시 중앙파출소 관내 일원을 중심으로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위한 야간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 합동 순찰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하는 이상동기범죄와 강력범죄 등 범죄예방을 통해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생활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정명여자고등학교 일대, 아파트, 주택단지 등 주거밀집지역과 범죄취약지역에서 가시적 도보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
- 목포경찰서는 공동체 치안 활성화 및 체감안전도 향상을 위해 주민과 함께하는 합동 순찰과 특별치안활동 및 각종 범죄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호남타임즈, 2023/10/27)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의 한계

시민의 정당방위는 인정 안해

칼 휘두르는 상대방 무릎과 옆구리 걷어차

유죄(형은 면제)

머리채 잡은 남편 팔을 뿌리쳐

남편이 넘어져 의식불명

유죄(1심 무죄, 2심 유죄)



경찰의 과잉대응은 제재

신호위반 오토바이 추격 단속 중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계석 들이받아 사망

경찰 유죄(벌금 2000만원)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

경찰이 단속 중 넘어뜨려 부상

4억4000만원 배상



- 법원은 경찰의 범인 제압이나 단속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있다. 작년 1월에는 경찰이 칼을 들고 난동 부리는 사람을 테이저건으로 제압하고 수갑을 채웠는데 이 사람이 의식을 잃고 사망한 사건에서 국가가 3억2000만 원을 유족에게 배상하라고 법원이 결정하면서 경찰 내부가 들끓기도 했다.
- 신호 위반 오토바이를 단속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경찰이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20년 12월 경찰관이 순찰차 근무를 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오토바이를 쫓아가 접근하자 놀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계석과 가로수를 들이받고 사망했다. 이에 법원은 “국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는 경찰관으로서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할 때는 안전한 장소로 유도해야 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 또 2019년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가 단속 경찰관을 붙잡자 경찰이 운전자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사건에서도 법원이 운전자에게 4억4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조선일보, 2023/08/06)

경찰의 임무와 경찰권의 한계

- 지난 2017년 난동을 부리는 취객을 막으려다 다치게 한 경찰관은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이 경찰관은 취객에게도 5300만원을 합의금으로 물어줬다.
- 또 강력 범죄의 표적이 된 시민들이 범인을 제압하려고 물리력을 써도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한다.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가 휘두른 흥기에 찔린 남성이 친구의 손을 쳐 흥기를 떨어뜨린 뒤 발로 무릎과 옆구리를 걷어찼다가 상해죄로 기소되자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지난 2021년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상대방이 흥기를 놓친 뒤에도 폭행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였다.
- 경찰 규칙에는 강력 범죄에 대해 총기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방어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선 '공권력의 공세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경찰대 법학과 한 교수는 "강력 범죄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만큼 공권력을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23/08/06)

경찰의 임무와 한계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 사무총장은 서울 종로경찰서에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앞서 김 사무총장은 이번 사태의 신속한 수습과 정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단체 내부의 변호사들과 논의를 한 결과 법적 처벌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국가적인 위상이 실추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보물인 선수들에게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사건을 누가 외부에 흘린 건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정 회장은 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빨리 사퇴하는 게 국민들에 대한 보답"이라고 말했다.
- 서민위는 이달 13일 정 회장을 업무방해·업무상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정 회장이 위르겐 클린스만 전 국가대표팀 감독을 일방적으로 임명하는 등 협회 관계자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취지다.
- 이들은 고발장에 'A매치 경기 결과를 놓고 볼 때 클린스만 감독이 대표팀을 이끌만한 자질이 되는가 하는 국민적 의구심에도 피고발인은 방관했다'며 '관리감독 소홀 등 관리자로서 주의의무 해태에 관한 그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에 해당하는 직무를 유기했다'고 적었다. 서민위는 정 회장과 클린스만 전 감독을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서울시경찰청에 고발했다.
-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비판 여론을 손흥민·이강인 선수의 다툼으로 돌려 이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에는 '대한축구협회는 이례적으로 선수들의 다툼을 인정하는 기자회견을 했다'며 '문제에 중심에 섰던 손흥민·이강인을 비롯해 아시안컵에서 최선을 다한 선수들과 선수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의 명예마저 훼손했다'고 썼다. 두 고발 건은 현재 종로경찰서에서 병합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머니투데이, 2024/2/27)

경찰의 임무와 조직

- 최근 흉악범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경(의무경찰) 제도 부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경찰은 현장에 필요한 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두 팔 벌리고 환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시민들은 험난한 시위현장에 또다시 투입되는 건 아닌지 깊은 우려감을 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 지난 2021년 6월을 끝으로 더 이상 의경을 선발하지 않았으며 지난 4월 남아있던 의경들이 전역하면서 전부 사라졌다. 다만, 이들의 법적 근거인 의무경찰대법은 유효해 입법 단계 등이 필요하지 않다 보니 제도 부활 자체는 어렵지 않은 상태다.
- 한 경찰 관계자 A씨는 경비 관련 업무를 담당하면서, 의경 제도 부활소식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그는 "사실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는 시위 현장에는 최대한 많은 경찰병력이 들어가는 게 좋다"며 "의경 제도가 다시금 도입되면 돌발상황에 대처하는 게 훨씬 수월하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다"고 말했다.
- 반면, 시민들은 경찰과 대조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의경 제도 부활 시, 의경들은 과격한 시위 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의경은 시험으로 임용된 경찰공무원과 다르게 전문지식이 없는데도 현장에 들어서 보조 역할을 맡아야 한다. 결국 경찰과 관련된 각종 힘든 잡무를 전담하면서 방법순찰이나 시위현장에 투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전북도민일보, 2023/08))

경찰의 임무와 조직

- 재정비를 마친 기동순찰대와 형사기동대 등 신설 조직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경찰청은 지난해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기동순찰대 28개대 2668명, 형사기동대 43개대 1335명을 배치했다. 기동순찰대는 관할 구역에 구애받지 않고 내부 범죄데이터 분석을 통해 도출된 범죄다발지역, 다중밀집장소 위주로 집중 투입된다. 형사기동대는 평상시에는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첩보 수집, 인지 등 외근 형사활동 및 중요 사건 수사에 집중한다.
- 경찰은 치안 수요가 급증하는 경우 기동순찰대나 형사기동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한편, 경찰청은 전문성 있는 인력들을 선발해 수사역량 증대에 집중할 계획이다. 경찰의 전체 안보수사 인력이 지난해 724명에서 올해 1127명으로 늘었고, 최근에는 안보수사대 수사관 일부를 퇴출하면서 새 인물을 선발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또한 운영 중인 '안보수사관 자격관리제'를 활용해 전문 인력을 보강할 예정이다.
- 간첩 등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권한인 '대공수사권'이 국가정보원에서 지난달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다. 국정원은 정보기관으로서, 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 본연 임무에 집중한다는 방침이지만 초기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찰청은 2024년 초 안보수사국 조직 구성에서조차 애를 먹었다. (아시아경제, 2024/02)

경찰 인사제도와 승진

- 2025년 경찰청은 50년 된 경찰 승진 제도를 변경했다. 핵심은 기존 경정·경감의 경우 심사승진과 시험승진 후보자를 각 50% 비율로 임용하던 방식을 변경해 심사와 시험 비율을 60%대 40%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대한민국 경찰관 현원은 2024년 말 기준 13만3760명.
- 전체 경찰관 10명 중 8.5명은 경장에서 경감까지 4단계 계급안에 몰려있다. 경찰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하는 순경공채 출신 중 상당수가 '상위 3% 이상' 계급인 '경정'을 최종 승진 목표로 두는 것도 이런 이유다.
- 통상 심사승진을 준비한다면 격무부서 자원은 물론, 근무평정 권한을 가진 상급자들의 눈에 들도록 몸과 마음을 갈아 넣어야 한다. 시험승진 대상자라면 반대로 격무부서를 피해야 한다. 근평은 1~3차 한 번이라도 최고점을 놓치면 시험에서 만점을 받고도 낙방할 수 있다.
- 2025년도 인사에서는 심사승진 비율이 60%로 높아지고, '무조건 성적순'이던 경정 승진 시험도 '시도경찰청별 인원(TO) 배정 후 성적순'으로 바뀌게 된다. 이 또한 2025년 7월부터는 심사승진 비율이 70%까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시험승진 비율은 30%로 떨어진다. 특히, 소속 및 근무지에 관계 없이 전국 석차 순으로 201명을 선발했던 경정 시험승진 임용 방식이, 각 시도경찰청별 쿼터(quota·할당)제로 바뀐다.

경찰관의 윤리

-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A 경위는 2019~2021년 수사과에 근무하며 고소인과 고발인의 동의 없이 사건 10여 건을 반려 처리하였다. 범죄가 성립되지 않거나 민사 사건인 경우 고소·고발인의 동의를 받아 반려해야 하는데, 임의로 사건을 조작한 겁니다. A 경위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많고 업무가 부담돼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 제주경찰청 수사 결과 A 경위는 형사사건을 처리하는데 사용하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키스)에 팀장의 ID로 접속해 반려 결재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정부는 2023년 11월부터 경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반려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제도를 폐지하고 고소·고발장 접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일부 고소·고발장 접수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민생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수사기관의 문턱조차 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랐기 때문입니다.
- 경찰 관계자는 "수사준칙 개정으로 앞으로 비슷한 문제는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키스)에 로그인할 때 문자로 접속 알림도 뜨고 있어 타인의 ID를 함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4.01)